

# 가난한 지자체 때문에... 씹쓸한 참전용사

### 월 참전수당 광주 13만원·전남 14만원 '전국 최하위권' 충남의 1/3 수준 불과...보훈부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쳐

광주·전남 지자체가 한국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전국 자치단체의 한국전쟁·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지자체 참전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월 42만원)과 별개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각각 예산을 분담해 지급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광주시(대상자 4719명)의 참전수당은 월 평균 13만원, 전남도(8982명)는 14만원이다.

광주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은 전북 12만 7000원에 이어 두번째, 전남은 4번째 수준이다. 광주·전남의 참전수당은 최고액인 충남도(41만 6000원)와는 28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참전수당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지급액의 차이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0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단체 평균인 10만 2000원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광주시 5개 자치구는 각각 2만 6000원씩 지급하는 데 그쳤다.

전남에서는 반대로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의 지급액이 더 컸다. 기초단체인 시군에서는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전국 최하위인 3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보훈부가 각 지자체에 배포한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2월 보훈부는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3000원) 수준

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광주·전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훈부가 지난해 10월에 추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는 '기초단체는 2024년 말까지 참전수당을 최소 8만원까지 인상하라'는 요구가 담겼지만, 광주시의 경우 이조차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급액 합계가 18만원(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지급액)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으나, 광주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훈부는 각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맞게 지급액을 지정하는 참전수당 성격상 지자체가 나서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급액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자부채 원 비율)는 40.7%, 전남도는 24.4%다.

광주시는 "현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액수가 크지만, 각 지자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수당 인상을 중용할 수 없다"며 "추후 협의를 거쳐 수당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도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서 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분담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속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전남도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수급자 수가 많다 보니 11억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했다"며 "2만원 인상안조차도 차원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끌어 모은 것이다. 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6·25 참전용사들의 나라 사랑 6·25전쟁 74주년 기념식이 25일 오전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이 국기에 대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서광주청연요양병원, 예고도 없이 '환자들 나가라'

### 사전 통보 않고 폐업 수순...환자들 대체 병원 찾느라 '분통' 간호사 등 직원들도 몰라...서구 '행정적 제재 불가능하다'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돌연 입원환자를 전원조치하고 폐업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의 예고 없는 전원조치에 대해 병원을 찾아다니는 등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25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매일동에 있는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이날 전체 413명 중 입원환자 336명에 대한 전원 조치를 시행했다.

서구는 병원 측이 병원을 폐업 신고하기 위한 절차로서 입원환자 전원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이 2020년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의 경영난으로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다.

전원 과정에서 병원측이 의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법상 병원은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으나, 병원 측은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들은 "보호자들끼리 소문을 듣고 전원 조치를 하러 병원으로 몰려들 때까지 병원 측은 전화로도, 문자 메시지로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친을 해당 병원에 모시고 있는 이모(53)씨는 "어제(24일) 병문안을 갔는데도 전원 조치와 관련한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다. 간호사와 직원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남도 아닌 부모를 모셔놓

은 보호자들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병원을 옮기다니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폐업이 결정돼 안내나 공고를 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원 조치의 경우 사전 승인사안이 아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25일부로 환자들을 전원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직원들도 이날 공지를 받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미처 통보하지 못했다"며 "폐업 여부와 폐업 일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서구는 병원 측에서 폐업 신고를 하면 입원환자 전원 여부, 진료기록부 관리 방안 마련 여부, 마약류 약품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업 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화순·영광 '6·25 학살' 유족 승소 잇따라

### 광주지법 '정부 손해배상해야'

한국전쟁 전후로 화순과 영광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중환)은 1950년 화순 동북국민학교 교사 A씨의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교사인 A씨는 인민군 점령지역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1950년 11월 12일 화순면 교리저수지에서 총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제자들이 A씨의 피해를 증언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판사 김두희)도 1950년 11월 2일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경전성 열차 전복사

건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1950년 12월 23일 화순군 백야면 수리 부근에서 군인의 총격으로 숨진 부부의 유족에게도 승소판결을 내리고 1억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1950년 12월 영광군 신원리 신흥 마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A씨 유족 측에게 총 1억38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한국전쟁 시기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적상 명백하다"며 "정부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산구 고교생 "가까운 학교 가고 싶어요"

### 시교육청, 원거리 배정 해결 추진

광주시교육청은 '광산구 고교생 원거리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산구는 중학교가 26개교인데 일반계고는 11개교에 불과해 해마다 1000명 안팎 학생이 다른 자치구에 배정되고 있다"면서 "광산구 지역 학생에 대한 고교 균형 배치와

과밀학급 완화 대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2027년에 168명 정원의 광산고(가칭)를 개교할 예정이다.

학교 법인의 비리로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은 명진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명진고는 최근 교육청에 학교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데 이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다.

명진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내년에 224명을 선발하게 된다. 현재 중3이 대상이다.

현재 광산구에 있는 평준화 일반고 11개교의 신입생 배치 정원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대상 광산구 지역 일반고 고입 연합 설명회를 개최해 고교 간 균형 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광산구 지역 학생 고교 균형 배치와 과밀학급 완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어치는  
기성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